

大學에서의 統一教育

全 得 柱
(崇田大 政治外交學科)

대학에서 統一教育을 效果的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政府가 대학에 과감하게 관계 자료를 공개하거나, 정부의 ‘民族和合, 民族統一方案’ 외에도 각 政黨의 상이한 統一政策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요망된다.

I. 序 論

第二次 世界大戰 이후의 冷戰構造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 놓았고 이로 인해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은 마침내 韓國戰爭이라는 同族相殘을 유발시켰다. 北韓이 이 戰爭을 이용하여 분단된 南韓을 무력 적화통일하려고 시도했다면 南韓도 역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유엔군과 함께 北韓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했다. 평양과 서울의 이러한 두 차례에 걸친 武力統一의 시도는 그 후 설정된 남·北韓의 基本關係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남·北韓은 공히 對話와 妥協 대신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대결을 일삼으며 어떻게 하면

자기 방식대로 統一을 할 것인가에 전념한 나머지 '70년대초 國際情勢의 변화로 야기된 남·北韓간의 對話의 기회를 포착하였으나 한반도의 진정한 統一基盤의 造成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과 평양은 그 이후에도 공히 ‘志操의 倫理’에 의거하여 그들의 政治活動을 함으로써 남·북간의 대결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兩斷論法的 思考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서울은 ‘志操의 倫理’에서 서서히 ‘責任의 倫理’로 전환하고 있는 데 반해서, 평양은 아직도 ‘志操의 倫理’에 집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

만약 남·북한 공히 ‘責任의 倫理’에 의거하여 정치행위를 한다면 한반도의 平和維持와 戰

1) Max Weber는 倫理를 ‘志操의 倫理’와 ‘責任의 倫理’로 구분하고 있다. ‘志操의 倫理’하에서의 政治行爲는 행위자의 諸價値와 生活原則에 의거해서만 결정되며, 이에 비해 ‘責任의 倫理’하에서는 政治行爲者들이 그 자신의 價値와 諸生活原則에 의거해서 政治行爲를 하되 타인이나 他集團들의 상이한 가치관이나 生活原則과의 충돌시 항상 그 결과를 고려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爭豫防은 어느 한 쪽의 책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兩者가 責任을 지야 한다는 認識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남·북한이 平和와 戰爭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야 한다는 ‘責任의 共同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걸여된 過程 속에서 統一教育을 실시함으로써 일부 정치인, 지식인과 학생들은 統一과 安保의 관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고, 感情的 統一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平和維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當爲의이고 觀念的인 思考의 노예가 되어 온 느낌을 준다. 이러한 사람들의 思考와 行動樣式의 동기구조는 統一論議를 선등과 동원을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정부의 統一教育은 反共教育과 함께 그동안 共產主義에 대한 일방적인 批判 내지 혐오감을 주입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70년대 이후 南·北對話가 시작된 이래 상당한 知識인과 젊은 학생들이 우리의 反共教育과 統一教育에 대해 회의를 일으켰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금년에는 버마 아웅산 폭파 테러사건(1983. 10. 9) 이래 北韓은 기본 입장을 바꾸어 미의적으로 제한된 開放政策을 쓰면서 남·북한간의 對話도 재개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한반도는 다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論文은 일부 지식인과 학생들의 왜곡된 統一觀을 지적하고 대학생들의 統一意識上의 문제점들을 제기·분석하여 국가이익에 비추어 우리의 통일교육의 課題와 方向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大學의 統一教育 施策에 조그마한 참고 자료가 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國民精神教育의 일부로서 統一教育

南·北韓은 공히 民族의 主體勢力으로서 단독정권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強大國(미·소)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美國式 民主主義와 蘇聯式 共產主義라는 정치개념을 바탕으로

각각 政權을 세움으로써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적 대결은 벌써 同族相殘이라는 韓國戰爭의 유발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러한 韓國戰爭으로 야기된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深化現象은 北은 北대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政治教育을 강화시켜 왔고, 南은 南대로 民主市民教育보다 오히려 反共教育이라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데올로기를 정치교육의 핵심으로 삼게 되었다.

그 후에 大韓民國은 국내외적 情勢에 부응하고, 특히 南·北 대결의 양상이 첨예화됨에 따라 승공교육, 안보교육, 통일교육 내지 경제교육을 앞세우기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이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變動社會로 진입됨으로써 야기된 여러 가지 社會·政治의 부작용과 마찰이 생기게 되었을 때 정부는 國民倫理教育을 대학의 國策科目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1975년 反共 越南이 월맹에 의해서 패망되었다”는 충격을 받자 정부는 國民精神教育의 必要性을 절감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²⁾

제 5공화국이 수립된 '80년대에 들어와서도 정부가 국민정신교육을 國政指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제 5공화국에 있어서 國民精神教育은 종래의 도덕교육, 민주시민교육, 정치사상교육, 경제교육, 새마을교육, 政訓教育, 국민윤리교육, 대학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및 통일안보교육 등의 上位體系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³⁾

대학에서의 統一教育은 '70년대 와서야 국민윤리 과목에서 처음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國民倫理 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대학의 일부 교수와 학생의 물이해는 국민윤리교육 발전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되어 왔다. 설상가상으로 유신체제 및 제 5공화국에 있어서 國民倫理를 담당하는 교수는 ‘어용 교수’ 내지 ‘무능 교수’만이 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교수와 학생이 認識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한 나라의 국민윤리는 주로 토착화된 종교가 담당하고 있는 것

2) 이규호,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원론」, (문우사, 1984), 참조.

3) 박용현, “國民精神教育의 指導力強化”, 「韓國 國民精神教育 研究會報」, 第 7 號, (1984. 9. 28), p. 4 참조.

이 통상이다. 구라파는 주로 기독교, 아랍국들은 주로 회교, 미국은 청도교, 일본은 유교가 그들의 生活方式를 주로 지배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선진국과는 달리 상이한 외래 종교와 민속신앙이 갈등·공존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이들의 상이한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통합·조정하는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社會·政治的 危機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첫째, 상이한 종교단체들의 이해관계는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혼란으로 국가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둘째, 상이한 宗教인들이 國民으로서 동포애를 느끼지 못하여 統合 대신 분열만을 일삼을 것이다.

셋째, 戰爭과 같은 위기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愛國精神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현여건하에서 국민윤리교육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오늘의 일부 知識人과 학생들은 韓國社會가 고도로 분업화된 과정에서 자기 專攻分野 내지 科目에만 치중한다 나머지 社會 全體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專攻에 의해 制約된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짙은 것 같다. 따라서 全體 社會를 보는 視角을 넓히며 分業化된 科目間의 協力を 증진하는 의미에서 哲學, 經濟學, 社會學, 歷史學, 政治學, 公法, 國民倫理, 그리고 心理學 등의 상이한 과목의 학자들로 구성된 大學 이데올로기 批判教育研究會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本 研究會는 우리의 政治理念을 韓國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계속 개발하며 이러한 理念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理念과 體制를 위협하는 諸般現代思想을 비판할 수 있는 能力을 함양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⁴⁾

이러한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과 統一教育은 필수 불가결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統一問題를 다루는 각 研究所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그 전제로 할 때 統一教育의 정확한

理念이 정립될 수 있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Ⅲ. 統一教育의 理念과 原則

제 5 공화국 이후 제시된 ‘民族和合·民主統一 方案’은 제 5 공화국 이전의 통일방안에 비하여 보다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民族和合·民主統一 方案’의 根本理念은 통일된 조국의 이상으로 民族·民主·自由·福祉를 내세우고 있는 바 이 목표는 水平的 차원과 垂直的 차원을 동시에 조망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民族和合·民主統一 方案’의 의도는 단순한 영토적 분단의 극복이라는 테두리, 즉 國土의 재결합을 넘어서 民族史의 展開된 차원에서 우리 민족이 추구해 온 ‘近代 民族國家 形成’ 과정에서 표출된 諸般社會·政治的 價値들의 유지 내지 획득·발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時·空間의 차원에서 統一問題를 취급하는 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分斷의 현실과 民族이 처해 있는 狀況의 論理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 있다.

이러한 分斷의 현실과 민족이 처한 狀況論理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 平和維持라는 가치가 民族의 統一이라는 社會·政治的 가치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民族의 統一 내지 祖國의 統一이라는 당면과제는 南·北韓간에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심화 속에서 兩斷論法的 思考가 흥미한 나머지 단일 목표로 압축시키고 싶은 충동을 갖는 경향이 짙다고 하겠다.⁵⁾

따라서 우리의 일부 社會·政治的 엘리트들은 이러한 흑백논리적 狀況下에서 平和維持보다는 현재로서 실현 불가능한 觀念的이고 추상적인 民族統一에 대해 더욱 매력은 느끼면서 대중의 이데올로기적 동원을 겨냥한 宣傳에 주력하고 있는 경향이 엿보인다. 북한도 그들의 獨裁體制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족이 처한 現實과 그 狀況을 전혀 도외시하고 보다 농도 짙은 宣

4) 金得柱, “이데올로기 비판교육과 국가안보”, 『國際問題』, 1984. 5., p. 33~41 참조.

5) 李洪九, “‘民族和合·民主統一 方案’의 歷史的, 理論的 照明”, ‘民族和合·民主統一 方案’ 발표 2주년 기념 『統一問題學術會』(대화사무국, 1984. 1. 25) 참조.

傳的 次元으로 목표를 단일화시킨 ‘民族統一’ 내지 ‘祖國統一’만을 앞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祖國統一은 그 이전에 남·북한간에 平和가 定着되는 것을 전제로 실현되어야 하며 그 원칙은 南·北韓 7·4 共同聲明에서 제기된 자주적·평화적·민주적 및 민족의 大同團結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祖國統一’을 보다 現實主義的으로 생각할 때 조국통일은 더우기 國民 개개인의 幸福과 福祉를 증진하며 부강하고 긍지 있는 民族國家를 기약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統一의 原則을 세웠어도 우리의 분단 현실과 국내외적 狀況要因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統一 노력은 실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한반도의 平和定着은 기실 統一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南·北韓 관계의 基本命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統一-理念和 原則下에서 우리의 統一-교육의 기본 원칙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다.

(1) 統一-교육의 基本理念은 민족 통일 의 외적·내적 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 한반도에서 戰爭을 예방하고 남·북한간에 信賴를 조성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統一이 아무리 시급하고 民族至上의 課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동탄의 歷史가 우리에게 보여주듯 同族相殘의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非暴力的 方法과 民主的 節次에 의하여 달성되도록 교육되어야 하겠다.

(2) 南·北韓 關係는 지금까지 ‘敵意의 共存(hostile coexistence)’에서 ‘협력적 공존’으로 이행되기 전에 우선 과도적 해결방법으로 ‘中立的 共存’ 상태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中立的 共存’이란 서울과 평양이 각각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해 준다”는 關係 패턴, 즉 서울과 평양간의 상호 무력 포기 및 제한된 協力の 關係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⁶⁾ 이처럼 南·北韓 關係의 改善에 대한 대안들은 계속 大學의 統一-교육에서 개발되어야 하겠다.

(3) 한반도를 둘러싼 國際環境의 精確한 認識과 判斷能力이 요청되므로 이러한 상황 判斷에 의거하여 한반도의 戰略的 重要性에 따른 주변 強大國들의 現象維持 내지는 打破政策에 대한 대응책이 統一-교육에서 계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다.

(4) 남·북한간의 民族統一 이전에 한반도의 平和定着이 우리의 제일 목적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의 統一-교육에서 南·北韓 對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代案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적극적·능동적 教育 자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國益에 유리할 것이다.

(5) 이러한 統一-논의의 개방화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國統統一을 모색하고 국내외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른 남·북 대화에 대한 장기적 計劃이 통일교육에서 개발되고 이미 수립된 統一-政策은 통일교육을 통해 다시 전달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통일정책의 教育化와 통일교육의 政策化가 개방된 統一-論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6) 우리의 統一-論議에 있어서 우리 체제내의 國民적 합의를 최소한도로 다룰 수 있도록 大學의 統一-교육에서 정부 통일방안뿐만 아니라 現存 韓國 政黨들의 統一-政策도 아울러 취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統一-문제에 대한 일부 大學生의 意識構造上的 문제점

어느 연구소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南·北韓 統一-문제에 대한 대학생의 意識構造는 지금까지의 國民精神教育의 일환으로 실시된 統一-교육의 實施結果, 일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략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정부의 統一-政策 推進姿勢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自由 民主主義를 절대로 포기하면서까지 大韓民國이 統一-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400명의 설문 대상자 중 90%에 달하고 있는 것은 판

6) Chun Tuk-Chu, "Die Beziehungen Zwischen Süd-und Nordkorea unter den Aspekten der Sicherheit und Wiedervereinigung" (安保와 統一의 側面에서 본 南·北韓關係). 본 논문은 1984년 9월 2일 서독 Bonn에서 개최된 한·독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임.

목할 만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학생들은 적화통일보다 차라리 분단된 상미하의 民主韓國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統一의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民族和合·民主統一 方案'에 부응하여 우선 南·北韓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점진적·단계적 방법을 선호하는 學生數가 무려 9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學生은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에 대한 회의와 現政府의 통일정책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욱 특기할 사항은 '民族統一'을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統一感傷主義들이 극소수이나마 있다는 사실이다. 그 외에도 北韓의 위장평화 전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⁷⁾도 특기할 만하다.

더욱 큰 문제는 일부 운동권 학생의 統一意識 構造를 5개 대학 공동 學術실험포지움에서 제시된 인쇄물(한반도 위기 상황과 민족통일)의 내용에서 分析한 결과에서 볼 수 있다.⁸⁾

그들은 國粹主義의 시각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南·北韓 쌍방의 統一政策 추진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일체의 外勢, 특히 美國과 日本을 分斷 고경화 세력 또는 統一 장애 요소로 배격하고 있으며 '民衆'이 주도하는 '統一運動' 내지 '民族解放鬭爭'으로 統一 성취를 주장하는 가운데 현 정부 당국은 '外勢와 결탁한 統一 방해세력'으로서 '民衆'의 이익과 의사에 相馳된다고 보고 있다.

일부 北韓의 상투 용어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對南戰略 路線과 맥락을 같이하는 주장 내지 마르크스주의적 社會分析의 틀을 援用하고 있는 것 같다. 통일의 基本 상수는 北韓이 상투적으로 쓰고 있는 '내부 민족 해방 투쟁'으로 보고 있으며, 統一運動 主導勢力은 '도시 민민', '도시 노동자', '민농', '소농', '중농' 등으로 정의하고 그 보조 세력은 '지식인', '학생', '광범위한 중산층' 및 '부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통일전선 전략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北韓의 階級意識 내지는 階級鬭爭

고취라는 의미에서 일부 학생들은 分斷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의식적·존재적 분단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南·北韓 交叉承認案도 北韓의 주장과 같이 '分斷의 合法化'와 '한반도의 分斷 固定化 政策'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過激學生들의 주장은 大學의 統一教育에 있어서의 통일 논의의 한계성과 가능성에 대한 問題意識을 더욱 提高시키고 있는 것이다.

V. 大學 統一教育의 課題와 方向

우리는 상기와 같이 대학생들의 統一意識上的 問題들을 극히 제한적 성격을 띤 것이지만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韓國의 民主化, 한반도의 平和 정착 및 民族의 統一이라는 장기 목표 하에 일부 대학생의 統一意識上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統一教育의 내외적 환경상의 문제점들을 分析하고 처방해야 하겠지만 이 論文은 統一教育의 內的 환경상의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향만을 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1) 대학에서의 통일 논의가 政治煽動的이 아닌 學術的 性格을 띠었을 때에는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과감한 開放性을 政府는 대학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開放性은 또한 자료수집의 금지를 가급적 철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2) 統一教育은 그 실제적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이 政治的 차원이 아닌 國家的 차원에서 실시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政府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좋은 예로 우리는 統一方案으로서 '民族和合·民主統一 方案'만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각 政黨의 統一政策의 상이한 견해들을 國民倫理 교재의 내용에 삽입하는 것도 그 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분층분한 統一教育 내지 통일교육 부제 현상을 고려할 때 現行 國民倫理教育 매당 주 4시간의 제조정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즉 人間과

7) 崇田大 社會科學研究所는 1984년 4월 崇田大學生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의식구조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8) 5개 대학 학도호국단(주최), 「한반도의 위기 상황과 민족 통일」, 1984. 5. 제 1회 5개 대학 공동 학술 심포지움 참조.

社會 및 전통사상과 경제교육을 한 시간으로, 民主主義와 共產主義를 포함한 과격 급진사상을 두 시간, 國際政治와 한반도 문제, 통일 안보교육을 한 시간으로 제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울러 國民倫理教育의 소단위 강의는(50명 이상) 주입식 강의에서 탈피한 토론식 강의를 위한 필수적인 要請이라 하겠다.

(4) 대학에서의 統一教育은 國民精神教育의 하위 체계인 이데올로기 비판교육과 國民倫理教育과의 밀접한 상호 보완관계 속에서 그리고 대학 당국과의 協力, 지원 체계하에서 실시되어야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협의회는 매년 실시하는 평가대상에 이데올로기 批判教育 내지 국민윤리교육의 실태조사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각 대학 부설 연구소의 活性化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을 감안할 때 政府와 大學은 예산과 자료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財政的·行政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특히 統一問題에 대한 專門家의 부족과 양성이 대체적으로 비흡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專門家 양성을 위한 해외 연수 내지 국내 연수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6) 당국이 한반도 주변 情勢와 우리의 위치 및 남·북한 對話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民族統一’의 강조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民族統一’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협상 전략 전술면을 보다 많이 다루도록 統一教育의 內容을 보완, 실시해야 할 것이다.

(7) 혐오와 증오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북괴’라는 용어 사용은 앞으로는 진정한 民族主義의 實現, 즉 民族統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政治宣傳의 차원에서는 그러한 用語 사용이 가능하나 學校教育이나 政府의 公式聲明과 言論에서는 이를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은 비종교체, 문학 및 예술 등을 이용하되 스테레오 타입식, 노골적, 직접적 비방 등은 삼가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간접적·우회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지속적인 효율성을 가질 것이다.

(9) 北韓의 宣傳用語와 과격한 운동권 학생들이 사용하는 用語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社會主義와 民主主義에 있어서의 民族, 民衆, 民族解放鬪爭, 下部構造, 메관자본 등의 諸概念을 구분, 定義하는 작업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등의 학자 등에 의해서 계획·실시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10) 統一教育政策의 立案時 教育心理者들의 조언과 방법론도 참고하는 것이 統一教育을 보다 내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